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방향

신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있다.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라는 화두를 던졌다. 국민행복과 중산층 70% 재건의 중심에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일자리가 자리잡고 있다.

복지공약의 핵심 브랜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는 보편적인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한다. 국민 누구나 보편적인 복지 혜택의 기회를 누리되,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가족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보편복지제도인 사회보험제도는 상당히 강화될 전망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100% 책임은 실현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증질환과 같은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의 상한을 두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연금급여액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노령, 장애, 사망과 같은 보편적 위험에 대처하는 부과 방식의 기초연금을 의미한다면 연금제도의 큰 틀의 개혁을 의미한다. 과거에 줄곧 논의되어온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기초연금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재정부담 때문에 폐기되었다. 국민이 동의하는 통합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대, 월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00% 정부 지원 약속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의미가 있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쳐 번번이 후퇴되었기 때

문에 특수직과 비정규직 노동인력시장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빈곤층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였으나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혹은 재산기준 때문에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층'이란 우스꽝스런 용어가 탄생하였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만 여전히 빈곤한 '차상위계층'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였다. 가구의 니드에 따라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에너지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은 옳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상대빈곤선으로 삼는 기준의 변화도 괄목할만한 진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잔여적 복지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실업, 노령, 장애, 사별, 이혼 등 위험에 빠진 가정의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교육과 직업훈련, 근로장려세제의 강화와 같은 근로유인정책을 통하여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

임신, 출산, 육아, 초중등학생 돌봄, 고교무상교육, 대학반값등록금에 이르는 정책들은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건강하게 육성하는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돈이 들겠지만 미래의 고령사회에 대비한 생산적인 투자이다. 장애나 장기요양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보편화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맞춤형 복지가 개인과 가정의 상황에 맞는 수요를 꼼꼼히 채워주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

인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형평에도 맞다. 문제는 현실을 반영하여 맞춰내는 것이 쉽지 않다. 형평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더 정교한 형평의 논란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통합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금융정보가 국세청에 연계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가 사회보험공단에 연결되고, 이들 정보들이 읍면동에 연결되어야 한다. 읍면동사무소가 소위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로 개편되고, 국민들이 전국 3500여개의 센터를 방문하면 16개 부처 293개 복지사업이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플랜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

복지재원의 조달방안은 조세감면 축소, 세출구조조정, 중복과 낭비 제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보, 국채발행, 증세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 어떤 수단을 선택하든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효율과 형평, 실행가능성, 납세자의 수용가능성,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행복시대라는 목적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목적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 사회보장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산한 재원이 총 복지재원이 되고, 동 재원으로 복지재정지출에 충당하는게 좋겠다. 한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급증을 우려하여 벌써부터 복지확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행복에는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빠져 현재도 미래도 없게 된다. 미래의 부담이 걱정된다면 미래의 리스크에 연동되는 복지시스템을 사회적 합의로 구축하자. **필견**